

# 양향자 “좀비 지도부” 직격… 국힘 지도부 사퇴론 재점화

“지선 패배 책임지고 사퇴” 압박  
장동혁 “지지해준 국민 모욕” 반발  
18일 의총 지도부 거취 분수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시

국민의힘 내에서 6·3 지방선거 참패 책임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8일 의원총회가 개최된다. 해당 의총이 ‘장동혁 지도부’의 향방을 가르는 첫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또 다시 지도부 사퇴를 두고 공개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며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양 최고위원의 ‘좀비 지도부’ 표현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셨을 것

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이 우선이라면서 거취에 대해서 “세 번, 네 번 찾아갔던 공주·부여·청양에서 당선되신

윤용근 의원은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선 당시 후보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지 못한 데다가, 지원에 나선 후보들이 대거 패배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지명적인 조광한 최고위원도 “우리 당의 일부 철없는 그룹들이 외부로 열삼히 떠돌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1일 최고위원에서도 공개 충돌한 바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당시 “우리 모두 사퇴하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 미래를 열어주면 좋겠다”고 지도부 동반 사퇴를 제안했고, 조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당시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책이 우선이라며 거취 논의에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장 대표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의총은 장 대표 거취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이번 의총에서 대안과미래·친한계·소장과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서다. 의총에서 대표를 사퇴시킬 수는 없지만, ‘지도부 책임론’에 힘을 실는 의원들

이 많아진다면 장 대표도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비당권파인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직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사퇴해야 지도부가 무너진다. 이에 두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면 당장 지도부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도부가 수세에 몰리면 다른 최고위원들도 직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버티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등, 장 대표의 퇴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8월 말 장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또다시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당대표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李,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 교황청에 평화 역할 요청

“세계 평화·국제 연대 위해 협력”  
청년대회 언급하며 관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유호식 추기경 겸 경직자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교황의 방북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기독교인과 평화의 상징인 레오 14세 교황과 이날 오전 바티칸 교황궁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다. 우리나라 정상과 교황의 만남은 약 5년 만이다. 2021년 10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전 교황과 만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세계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레오 14세 교황에게 한반도 평화에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계기 교황의 방한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는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직접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청년 행사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두 번째이자 가톨릭이 다수 종교가 아닌 국

가에서는 처음 열린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훈풍이 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현재는 남북 관계 경색이 고착 국면에 빠진 상황이라서 이 대통령이 방북을 정식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요청했다더라도 이 사실을 공개할 지는 미지수다. 문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교황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방북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 기념연설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를 언급하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청년대회를 언급하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선과 철조망, 국경의 제약 없이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며, 이를 위한 교황청의 관심과 건설적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위원장과도 면담했다.

/서예진 기자

## 하반기 공공기관 2차이전 대규모 기업 투자 속도

총리 주재 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

정부는 지방균형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토공간의 대전환이 실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중 공공기관 2차이전을 비롯해 기업들의 대대적 투자 방안 등의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해당 정책의 경과를 밝혔다.

김 총리는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준비해 온 성장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이전 등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한 지방균형국가를 향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정책을 구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부터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의 자원을 단순하게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 및 관리계획 ▲5극 3특 성장엔진 7대 지원과키지 ▲초광역단위 국토계획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하는 등 충분한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지역 주도 R&D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 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매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서예진 기자 kys@

## 李 대통령, 음모론·사적 검문행위 엄정 대응 지시

>> 1면 ‘유럽서 화상 수보회의’서 계속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주장을 퍼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

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 에 대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

위에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성을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에 대해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의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며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빠르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